

새 정부의 주파수정책 과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신설이 핵심이 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 주요사항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재허가권은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갖도록 했고, 종합유선방송인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는 미래부가 하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경우 허가 절차 가운데 하나인 무선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기술적 심사를 미래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주파수 정책 결정 복잡해져

방송과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의 관할권에 대한 사항으로, 주파수 관할은 방통위에서, 통신과 관련된 주파수관할은 미래부에서, 그리고, 새로운 주파수 정책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결정사항을 보고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앞으로 주파수정책 수립시 많은 논란이 벌어 질 뿐 아니라 정책결정 프로세스가 아주 복잡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모든 주파수 정책에 관한한, 모든 방송통신정책을 방통위에서 결정했던 지난 정부의 시스템이 차라리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다.

비록 지난 정부에서는 합의체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한 개의 독립기관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지 않았는가. 통과된 정부조직법에서 주파수 관련 부처의 역할 분담 내용에 따르면 특정주파수와 관련된 산업진흥 또는 공공복지를 위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미래부의 계획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협의체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른 700MHz대역의 주파수의 관할권을 놓고 방통위와 미래부의 힘겨루기와 이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ICT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들이 방통위 출신이 다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옛 동료해보다는 조직의 이익논리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화이트페이스 관련 최종 정책 미결정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모바일스마트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야기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트래픽의 폭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주파수 대역 중 지역적으로 TV방송주파수 대역 (54MHz ~ 806MHz) 이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 즉 TV 화이트스페이스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2012년 9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글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cshong@khu.ac.kr

글쓴이는 경희대 전자공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Keio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KT통신망연구소 수석연구원/연구실장, UCI 방문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경희대 정보지원처장, (사)개방형통신망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심지어 600MHz 대역의 방송주파수 재배치할 것이며 이를 무선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2년 2월, 미 상하원이 합의한 법안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은 실업자 지원대책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에는 이중 상당량의 대역을 비인가 대역인 와이파이(WiFi)로 개방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구글은 지난해 6월 관련 업체들과 함께 슈퍼 와이파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올 3월에는 TV화이트스페이스를 검색하는 지도서비스를 공개했고,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45일간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FCC는 구글을 포함하여 10개의 기업을 화이트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Ofcom은 지난해 11월 화이트스페이스 비인가 단말의 단말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스펙트럼 브릿지(Spectrum Bridge)등 몇 개의 단말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했으며 금년에 화이트스페이스를 이용한 인터넷시범서비스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국립정보통신연구소(NICT)는 지난 1월 TV 화이트스페이스서비스 시스템을 세계최초로 구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TV 화이트스페이스와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가. 지난 정부에서 700MHz대역의 화이트스페이스인 108MHz의 대역폭을 지상파 방송사들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향후 고화질 방송과 난시청해소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방통위는 이중 40MHz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려는 방침을 정한 정도이며 최종 결정은 미뤄 놓은 상태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최종 정책 미결정에 따라, 현재 TV 화이트스페이스 관련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이트스페이스 관련 정책이 늦어질 경우, 결국 외국업체들의 장비를 수입하여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센티브경매제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700MHz대역을 인터넷 및 통신용으로 활

용할 경우 관련한 국민소득 창출효과는 약 4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정부가 방송계 입장을 반영해 7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재배치할 경우, 산업적인 효과를 저버림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진 주파수 정책이 될 것임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는 TV 화이트스페이스 중 일부를 우선 비인가 WiFi용으로 확보하고 일부는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700MHz이하 대역에 존재하는 TV 화이트스페이스도 비인가 WiFi로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어차피 해당 대역의 화이트스페이스는 일반 이동통신용을 사용하기에는 개별 유휴대역폭이 좁아 경매할 수 없는 대역이므로 다수의 화이트스페이스 대역을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무선인터넷용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TV 화이트스페이스를 통신용으로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경매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경매제는 화이트스페이스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 중인 TV방송사업자들이 무선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경매수익의 일부를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할당하지 않은 TV 화이트스페이스인 700MHz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시 인센티브 경매제를 도입함은 물론 비인가 주파수로 개방하여 무료인터넷 사용기회를 할당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매재원의 일부는 TV 화이트스페이스를 활용한 무료 WiFi시설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의 도입으로 인터넷경제의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편적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 정부는 TV 화이트스페이스 정책과 정책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하여 관련 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ST**